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與 “입법 폭주 막아낼 것”

野 환노위서 부의 요구의 건 상정 與 소속 위원들 반발... 전원 퇴장 “당 지도부에 현재 권한쟁의 요청”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당 소속 위원이 퇴장한 채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의 최대 쟁점이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에 반

대나 기권은 없었다.

앞서 김영진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면서 “지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환노위위원장이 법사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논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상임위 통과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법사위에서 논의

가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진전이 없을 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이자 여당 측 간사는 “야당 측에서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의하고 합

의를 해서 타협을 의뢰하는 것을 시간 끌기라고 하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밀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국민에게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나.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도 않았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나”라고 반박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주된 책무이다.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6개월 이상 논의했다. 백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가게 된다면 또 한번 의원들의 논의와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절차적으로 지연할 수 없다. 오늘 환노위에서 결론나는 것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장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며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되자 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법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것이다. 이제와서 윤 정부 발목 잡고 괴롭히기 위해 국민의 삶과 법치마저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와 민생 미래 일자리 해치는 이 법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청년·취약계층 정책지원 속도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학교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에서 학생예비군이 겪는 학업상 불이익은 원천 차단하고, 훈련 실비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산토끼(중도·무당층) 공략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입안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 방문,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훈련장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곳에 있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무료 수송 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하는 수송 버스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비군 훈련 시 대학 수업 출석 미인정’ 사례를 막기 위해, 예비군법 제10조의 2 등 관련 법안도 보

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예비군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시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대 청년의 삶과 밀접한 학생예비군 처우 문제 개선에 나서면서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누구나 토익 5년’ 정책(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TOEIC)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5년 확대)을 제안한 바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4일 예비군 3권 보장 정

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청년 정책을)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현장에는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등과 함께 숭실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총학생회장, 국방부 측에서도 참석했다.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같은 날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100만원→200만원), 이자율 10%대 인하 ▲식품요식업계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화 및 수수료 무료화, 발급 기간 단축 등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가 제안한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정책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다음 현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를 맞은 택배 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내부단속 나선 이재명... 검찰·징계 줄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비위, 문자 테러 강경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으킨 소용돌이로 당 안팎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비위 사건이 계속되자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성호 부천시의원과 관련해 윤리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박시 의원은 해당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부천시의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엄벌하겠다고 지시했고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성비위자와 관련해 해선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 앞으로 징계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비(非)이재명계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강성당원 A씨를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주 A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A씨는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를 인지한 전 의원이 조 정식 사무총장에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노동탄압·과잉수사’ 대응 TF 구성

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잉수사에 대해 역olum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故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기획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 관련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내정됐고, 간사

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위원으로는 우원식(환노위)·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최인호(국토위 간사)·이용우(정무위원회)·최기상(행정안전위원회)·황운하(정무위·운영위) 의원이 함께 한다.

이에 상임위 별로 현안 질의를 비롯해 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불법단건 하도급 근절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를 때려잡는 것이 노동개혁이 될 순 없다. 제2, 제3의 양회동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與 “현장 위법 만연... 공권력 바로 세울 것”

>> 1면 ‘불법전력단체 집회...’서 계속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단호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천명함으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도심의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